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의대 공모’ 지역 갈등 김지사 ‘정치력’ 주목

‘공모 방식 단일 의대 선정’ 전환 이후 반발 심화
오늘 목포대총장 등과 회동...18일 순천 여론 수렴

전남도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방식을 ‘통합의대’(목포대+순천대)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선정으로 전환한 이후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동·서부권 릴레이 회동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15일 오후 도청에서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공모 방식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서부권 여론을 수렴한다.

김 지사가 이달 2일 답화문을 통해 공모 방식을 통해 국립의대 설립 ‘단일의대’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목포지역 내 반발과 공모 중단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지사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공모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는 18일엔 이병은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과 만나 의대 공모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부권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 지사가 이번 릴레이 회동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 내 하나 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릴레이 회동에도 불구하고 전남 서부권의 반발이 계속되면 공모 방식으로 단일의대를 선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전남권 의대 설립을 마무리하려는 김 지사의 구상이 자칫 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담화문 발표(2일)에 이어, 4월 정례회(3일)에서 ‘공모의 공정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동부권·서부권의 지지 없이는 의대 설립 공모 진행에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동부권과 서부권 양 지역 모두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 방안에 힘을 실어줄 경우 향후 공모 절차는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는 ▲지역 의료체계 완결성 ▲도민 건강권 ▲지역 상생발전 ▲공정성 확보 등 4대 원칙을 기조로 2026학년도 신설(정원 200명)을 목표로 단일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는 복안이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원인 ‘미궁’·처벌 ‘미진’...여전한 ‘상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침몰 원인은 결국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세월호가 출항 이전부터 안고 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명 피해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14일 재단법인 4·16재단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최초 접수됐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목포해경 등이 구조에 나섰다. 탑승객 477명 중 289명이 사망했다. 미수습자 5명의 시신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졌으나 선체 내부 결함인지, 외부 충격의 영향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각 위원회 관계자 다수는 ‘예견된 사고’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선체 노후화’와 ‘무리한 증·개축’이다.

Today

- 채상병 특검·이태원특별법 처리? 4면
- 광주경철도 ‘음주운전’ 6면
- 6연승 KIA·5연패 광주FC ‘희비’ 16면

세월호 참사 10주기

〈상〉그날의 바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침몰 원인 미궁’, ‘처벌자 책임 미진’ 등 미완의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여전히 팽목항에 머물게 하고 있다. 이후에도 광주 화정아 이파크 붕괴 참사 같은 인재(人災)가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너도나도 ‘안전 사회’를 외쳤지만 10·29 이태원 참사까지 재난은 반복되고 있다.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침몰 이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을 짚어보며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무엇이고, 희생자들을 가슴에 안은 채 진실에 가까워지려 하는 이들의 모습을 2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특조위·선체조사위·사회적참사특조위도 규명 실패 노후 선박 무리한 증·개축, 과적 등 문제점 ‘수두룩’ 해경 지휘부 전원 무죄...출동했던 실무진들만 처벌

2012년 10월 정해진해운은 일본에서 18년간 운영했던 ‘나미노우에호’를 들여온 뒤 증·개축을 거쳐 2013년 3월 세월호란 이름으로 인천-제주 운항을 시작했다.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미 18년간 사용했던 노후된 배가 다시 출항할 수 있게 된 것은 2017년 개정된 ‘대한민국해운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개정 전 최대 20년이었던 운항 가능 수명은 개정 후 선박검사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5년 연장을 가능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다시 5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선체조사위원회는 “무리한 규제 완화가 참사의 불씨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가 수용할 수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검사역시 엉터리로 드러났다. 모든 선박은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중량과 무게 중심의 높이를 측정하는 ‘경사시험’을 거친다. 이때 배가 바람이나 파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기울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자리를 잡는 ‘복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적

량을 산출한다. 하지만 세월호는 개조 중에 연료와 평형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경사시험을 받아 가능 적재량이 훨씬 높게 나왔음에도 감독 기관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선체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을 지목했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0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시를 내렸던 해경 지휘부 11명과 달리 현장에 출동했던 실무진들이 유죄를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세월호광주시민사회모임 관계자는 “세월호는 명백히 정부와 개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다. 조금 더 안전에 민감한 사회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정부에서 밝혀낸 진실이 도대체 뭐냐. 뭐가 두려워 자꾸만 진실을 가리는 것이지 어이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매년 4월이 되면 아직 도망치는 이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다 시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각각 다짐했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달아질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은 물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기자

법무법인 거북이 설립인사

저는 이번에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정은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거북이의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주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5일
법무법인 거북이 대표변호사 김태호 올림

■ 구 성원 : 김환기, 양미림, 홍정표 변호사
■ 주 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안로112, B동 302호(치평동, 제갈랑비즈타워)
■ 대표전화 : T. 062-710-0900, F. 062-710-0907
■ 광주지산 분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10, 2층(지산동)
■ 서울서초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4, 503호(서초동, 화평빌딩)

◇ 주요 학력 및 경력 ◇
·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 34기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함평 나비 대축제

제 26회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2024. 4. 26. (금) - 5. 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관광협회 (사)한국응용곤충학회